

도내 지방도 터널에 '피난연결통로'가 없다

48명 인명피해 낸 남원 사매2터널 다중 추돌 등 되풀이 가능성 우려 이병도 도의원, "500m 이상 총 10곳 확인 결과 방재시설 '無' 지적

총 48명의 인명피해를 낸 남원 사매2터널 다중 추돌 및 화재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3)은 지난 13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지방도 터널 전체가 제연설비 미설치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사매2터널과 같은 방재시설 미설치 터널이다"며 "확인 결과 제연설비는 물론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된 터널도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연장등급 3등급 이상 지방도 터널은 총 10개소로 관련 지침 제정(2009년 8월 24일) 당



시나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 500m 이상 터널(연장등급 3등급)의 경우, '피난연결통로와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다"면서 "도내 500m 이상 터널 단 한 곳도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10개 터널 모두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지침 제정(2009년 8월 24일) 이전에 모두 설계돼 방재시설 설치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병도 의원은 "가장 최근에 준공(2016년 준공)된 계곡터널의 경우 방재등급 2등급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은 터널인데도 불구하고, 2003~2006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 2009년부터 전북도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당시 방재시설 설치 지침이 제정 시행된 상태였음에도, 전북도는 익산청에 다가 방재시설을 넣어 재설계를 요구

하지 않았다"며 "설계변경 및 예산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상 번거로움 때문에 방재시설 설치의무를 간과한 것은 도민의 안전보다 행정편의가 우선이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터널 방재시설 설치 지침 개정 이후에도 전북도는 방재계획 재수립 및 예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향후 전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에서 남원 사매2터널 같은 사고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고, 관련 지침도 강화 개정된 만큼, 도내 기존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 의무설치, 피난통로 설치 등 방재시설 추가 설치가 시급하며,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 보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도내 2등급, 3등급 터널에 대해서만큼은 터널화재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대부분 수의계약"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지난 13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어, 독과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의 최근 3년간 지원사업별 계약방식 조사결과, 전주시는 전 사업을 '입찰'로 계약하고 있었지만, 군산시, 익산시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도부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정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만이라도 입찰로 진행하도록 해서 도내 업체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수해 피해에 대한 하천관리 부실"

문건위, 건설교통국 대상 행감서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13일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정린 위원장(남원1)은 이번 수해의 원인 중 하나인 하천 제방 붕괴를 언급하며, "하천의 특성상 폭신부와 합류부는 특히 취약해서 집중호우때마다 제방 유실이나 붕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의 특성을 반영한 호안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오광근 의원(전주2)은 "작년 5월 국토부에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발표가 있었는데 전북도는 단 한군데도 승격되지 못했다"며, 이번엔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때라도 댐 하류 지방하천에 대해 추가 승격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또 "지방하천 지방이양으로 인해 하천정비예산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며 "댐 하류지역 하천을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승격시켜 홍수피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올여름 수해로 인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매우 실감했다"며 "도내 지방하천 관리원이 26명으로 한 명당 맡게는 45개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냐"고 질타하고, "더 이상 도민들이 홍수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천관리원을 14개 시·군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등의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차 한-메콩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메콩, 전략적 동반 관계로"

문 대통령, 정상회의서... ICT 등 협력 내실화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제2차 한·메콩 정상 화상회의에 참석해 메콩 지역 국가들과의 역대 협력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문 대통령과 메콩 유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한·메콩 정상회의는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등 메콩 지역 국가 5개국과 우리나라가 함께하는 다자회의체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비전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응우옌 쉐언 폭 베트남 총리와 이번 회의를 공동 주재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메콩 교역이 이미 작년 수준에 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방역 물품 협력 등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메콩 협력의 내실화와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한

'한·메콩 협력기금' 증액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메콩 협력기금'에 300만불을 기여했는데, 내년에는 400만불 기여를 추진 중에 있다.

작년 한·메콩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데 이어, 올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양측 관계가 한발 더 나아간 만큼 내년에는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맞아 한·메콩 교류의 해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한강-메콩강 선언에서 합의한 7대 우선협력 분야(▲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업·농촌 개발 ▲인프라 ▲ICT ▲환경 ▲비전통안보)를 중심으로, 한·메콩 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고, 결과문서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뉴시스

도의회 환복위, 새만금해양수산물 행감 중단

집행부서 답변 미흡 등으로 요청... 오늘 오전 다시 재개기로 새만금 상류·호내 수질 관련 전북도 대응 문제 집중 질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지난 13일 새만금해양수산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집행부의 답변 및 자료준비 미흡 등으로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는 최근 새만금 상류 및 호내 수질과 관련한 전북도의 대응 문제 등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사안이 아님에도, 지금까지 환경부는 이런 저런 핑계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전북도가 환경부에 명확하게 해수유통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해야 할 때라며,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해 명확한 대책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전북도가 주장하는 바처럼 새만금 내부개발이 73%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새만금 수질에 대한 방안이 해수유통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현재 조성된 지면 높이로는 해수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지적하며, "지금부터 해수유통을 염두에 둔 사전 준비와 계획이 필요함에도 전북도의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새만금 상류 수질의 경우 그 주요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축산오염원의 문제해결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익산 왕궁지역의 현업조사 매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살피고, 향후 김제 용지 현업조사 매입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또한, "전북도는 공공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시·군과 함께 수시점검을 통해 축산농가 및 재활용업체 등의 축산분뇨 무단 방류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감축할 것"을 요청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019년 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기림' 육성사업의 정상 결과와 관련해 전북도가 보조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이명연 환복위원장은 "이번 새만금해양수산물국의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집행부의 미진한 답변이 이어지고, 자료준비 또한 미진하다고 판단돼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해양수산물국의 다음 감사는 16일 오전 10시에 다시 재개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국내 유일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 지징!!

축! 전주매일 창간

名品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미래 신성장 산업의 새로운 거점

유치업종 | 전기자동차 제조, 신재생에너지산업, 부품제조산업, 첨단융합산업, 융복합산업 등

분양가 50만원/3.3㎡

분양문의 063)450-9292

사업시행 **KF**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관리 새만금개발청 | 전라북도 | 군산시